

보도시점 2025. 3. 11.(화) 15:30 배포 2025. 3. 11(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 ①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 (1→2점)
 - ②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 (120→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200%)
 - ③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 항목 배점 상향 (최대 3→4점)
-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 ①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 + '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 ②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중대·희귀·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 ③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①저출생대책('24.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②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 ③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였다.
-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 ①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우대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한다.
 -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연간 7,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 이번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은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통상 4인)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①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②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③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④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시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①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②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25년 1.4만호)

-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여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경쟁률('24.11월): (평균) 40:1 / (서울) 311:1

-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신규출산 가구는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200%)한다.

- 그동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만 소득기준이 달라* 유사 제도 간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는 취지이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저소득층 지원), 다자녀가구 유형은 매입임대·전세임대 소득기준이 동일

-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 ▶ (매입임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
- ▶ (전세임대) LH에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전세금 상당부분 지원
- ▶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주택기금 출자)가 주택 건설 후 주변 시세의 70~95% 수준으로 임대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

		현 행		개 선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공공임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	130%	200%	130%	200%
	전세임대	100%	120%	130%	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		120%		120%	200%

③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현행) 자녀1명 1점, 2명 2점, 3명이상 3점 → (개선) 1명 2점, 2명 3점, 3명이상 4점

④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25년 5,000명)

-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①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앞으로는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 예) 자녀(6세 이하)가 2명인 경우 4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운영주체 뿐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 부모들의 선호가 특히 높다.
-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상가 밀집지역, 지하철 역 인근 등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 구체적으로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장사업으로 포함하고, 올해 수립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 결혼서비스 분야(소위 스프메 포함)는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한 바 있다.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년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프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달 육아휴직 사용 확대 과제에 이어 ①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복지부), ②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여가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③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법제처)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아이를 원하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① 먼저, 6.19 대책에서 발표된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 ▶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에 미혼남녀 포함, 지원횟수 확대 ('25.1월~)
* ('24년) 임신준비 부부 대상/생애 1회 → ('25년) 모든 20~49세 남녀 대상/최대 3회
- ▶ (난임시술) 최대 시술 지원횟수 확대(여성 1인당 25회 → 아이당 25회),
본인부담률 인하(45세 이상 여성 50% → **30%**) ('24.11월~)

- 가임력 검사 지원의 경우, 금년부터 지원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한 이후 검사 신청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 '25.2월 누적 신청자 94,146명 → 전년대비 월평균 신청자 3배 이상 급증

- 이에, 당초 설정한 금년 성과목표('25년 17만명)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타겟층 대상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재원확보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②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③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금년 중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도 추가 설치한다.

* 현재 중앙 1개소 및 권역 9개소 운영 중

□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① 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금년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 긴급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요건을 완화¹⁾하고, 추가요금도 인하²⁾하여 금년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운영 중이다.

* 1)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 2시간 전까지 신청 / 2) 시간당 4,500원→3,000원

③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 돌봄센터 추가 지정시 기존 센터의 업무부담이 분산되고, 돌보미 추가 채용*도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일부 센터에서는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부과되는 각종 고용 및 산업안전 관련 의무로 인해 돌보미 추가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④ 아울러,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관련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5.3.6.)

-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한다.
 -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는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정비대상 용어 발굴 → 대안 용어 확정 →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비 대상 용어는 결혼·출산·육아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한다.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 '초고령화 대응방향' 두 번째 대책*으로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실버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하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제8차 회의(1.23)에서 첫 번째 대책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 발표
- 최근의 고령인구는 기술 수용성과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고 있어 그동안 '부담'으로만 인식해 온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 * 우리나라 1인당 고령층 순자산액(통계청): ('16) 2.9억원 → ('19) 3.4억원 → ('22) 4.5억원
 - * 글로벌 고령인구의 지출액: '20년 8.7조 달러 → '30년 약 15조 달러로 약 2배 증가
 - 특히, 최근 기존의 고령친화산업이 첨단기술과 융합된 Age-Tech 제품·서비스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Age-Tech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 * (美) 국립노화연구소(NIA)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 및 R&D투자
 - * (日) 개호보험을 통해 돌봄로봇 보급 지원, 항노화 분야 첨단재생의료 규제 혁신
 - * (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버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24.1월)'을 발표하는 등 실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중

※ Age-Tech의 정의 및 적용기술별 주요사례

(정의)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AI, IoT, 웨어러블, 로봇틱스, 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 서비스

구분 기술	제품	SW/서비스
AI	 음성 명령을 통해 정보제공, 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등 보조 * AI 스피커	 고령층을 위해 학습된 AI 모델 및 응용 SW/서비스 *고령자용 AI 케어콜 서비스
IoT	 고령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제품 및 설비 *스마트 지팡이, 낙상예방 침대	 고령자용 IoT 제품 및 수집 데이터 기반의 SW/서비스 *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
웨어러블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 능력을 제고하는 착용형 기기 * 보행보조 웨어러블 AI 보청기 등	 고령자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SW/서비스 *웨어러블 맞춤 운동 서비스
로봇	 고령자의 신체 및 정서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 *배설 케어 로봇, 반려 로봇	 고령자용 로봇을 통해 제공되는 SW/서비스 *요양원 로봇 대여·관리
바이오테크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신약개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항노화·재생의료 치료를 위한 관광 서비스 등

- 글로벌 Age-Tech 산업 규모는 '25년에 3.2조 달러(연평균 23%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①돌봄인력 부족문제 해소, ②복지비용 절감, ③고령자 건강수명 연장, ④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Tech 기업·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 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5개 분야 ①AI 돌봄로봇, ②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③노인성 질환 치료, ④항노화·재생의료 ⑤스마트 홈케어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 분야별 중점분야 선정 사유 >

분야	중점 분야 선정 사유
AI 돌봄로봇	- 한국은 세계적인 로봇 제조 기술 보유국이고, 정부 관심 높음 - 돌봄 인력 부족(‘25년 돌봄 노동자 20만 명 부족) 현상 완화 가능 - 고령자 요양시설에 활용 수요 상승(시설 거주비율 ‘35년 15%까지 증가 전망) - 글로벌 돌봄로봇 시장 ‘23년 19억달러 → ‘32년 73억달러(연평균 15.9% 성장)
웨어러블 (근력보조 등)· 디지털의료기기 (건강모니터링 등)	-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IT 기업이 웨어러블 기술을 선도 - 혈압·심박수 모니터링, 근력 보조기기 등 노인 맞춤형 기술개발 활발 - 일부 병원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정신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착수 -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 ‘25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 성장 전망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치료	- 치매 등 노인성질환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 -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조기 진단 기술이 발전 - 한국 치매환자 ‘50년 300만 명 예상 및 글로벌 치매환자 증가 전망
항노화 · 재생의료 (줄기세포 등)	- 국내 기업·연구소가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선도연구 중 - 한의학과 현대 바이오 기술 결합시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 가능 - 노화 방지 및 세포 재생기술 등 고령자 맞춤 치료 수요 증가 - 화장품 및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 가능
스마트 홈케어	-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및 ICT 인프라 - 주요 대기업들이 스마트 홈케어 시장에 적극 투자 - 스마트홈 기술은 스마트시티 구축과 연계 가능 - ‘30년까지 글로벌 스마트 홈케어 시장 규모 1,800억 달러 성장 예상 - 해외진출에 특별한 규제 제한이 없음

❶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한다.

- 우선,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 대폭 확대 (현재 연간 약 3,900억원 투자 추정)를 목표로 ‘가칭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 분야별 주요 개발 필요기술 예시 >

- ▶ (AI 돌봄로봇) 로봇의 팔이 인간처럼 세밀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Physical AI’ 기술
- ▶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근육 피로도를 낮춰주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위한 근육 피로도 측정기술, 개인 맞춤치료를 위한 생체마커(땀, 호흡 등) 센싱기술 등
- ▶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 등의 **노화진행 패턴분석 기술** 및 **예방적 진단 알고리즘**
- ▶ (항노화·재생의료) 세포기반의 **특정조직 재생기술**, DNA 손상복구 기반 **역노화 기술** 등
- ▶ (스마트 홈케어) AI기반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자동화**,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 등

- 또한,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하여 Age-Tech로 고도화 하는 약 3,000억원 규모(예타 신청 기준)의 ^{가칭}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 예시: (AI돌봄로봇·웨어러블) 보행보조기+GPS·IoT⇒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내시경+AI⇒AI 내시경(검사하면서 자동으로 암 등 병변 탐지) (스마트 홈케어) 침대+IoT 센싱⇒스마트침대(수면분석 및 자동 수면자세 변경)

-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현재 215억원 조성)한다.

②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한다.

-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 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 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하여,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위해 일본·대만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 아울러, '25년 1월에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종사자 등이 Age-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 으로 구축하고,

* 현재 대구/부산/성남/광주/용인 등 5개소 운영 중

-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요양 시설 등을 Age-Tech 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③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등 Age-Tech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 우선,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 30%)'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등 Age-Tech 품목을 확대한다.

* ('24.9.~'25.8.) AI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품목에 대한 예비급여 시행 중

-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연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Age-Tech 제품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신청 등재 외에 직권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에 Age-Tech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또한, 스마트경로당*을 '25년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수요 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Tech 제품·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 설치, 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하여 각종 여가·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아울러,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24년 5.1조원에서 '25년 6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 '25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을 '24년 7.1조원에서 '25년 7.9조원으로 확대한다.

④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 추진, 민관 협업 활성화 등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Age-Tech 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 전통적 고령친화산업 위주의 법제도를 Age-Tech 기반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 연구를 추진한다.

* AI, IoT, 로봇 등 기술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Age-Tech 산업 정의 육성 분야 지원 정책 확대 등 반영

- 또한,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Age-Tech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 인프라로 개편하고,
 - 노화관련 연구플랫폼(유전체 데이터 분석·인체조직 분석 플랫폼 등) 구축, 연구기관 간 코호트(Cohort)·데이터 연계 확대 및 노화 연구 자원 관리(지표·데이터 표준화 등)를 강화한다.

- 나아가, Age-Tech 산업에서 민관 협업 활성화를 위해 Age-Tech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한다.

* AI·IoT·로봇·바이오테크 등 관련 분야의 부처,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 아울러, 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Age-Tech 분야(예: 금융, 교육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하여

- 금년 3월부터 진행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처별 인구 T/F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구조 변화, AI·디지털화 등 기술변화에 따른 '향후 10년간 산업·직업별 고용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인력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향후 10년간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내주 초 발표될 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한국고용정보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히 고쳐나갈 것이며,
 -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 또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하여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붙임2】 실버경제, Age-Tech, 고령친화산업 개념 비교

【별첨1】 권한대행 모두발언

【별첨2】 저출생대책(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별첨3】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 회의총괄 및 협조 >

담당 부서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성권 (02-2100-1211)
		담당자	사 무 관	송정아 (02-2100-1212) 류한솔 (02-2100-1213)
	<협조>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5-5910)
		담당자	사 무 관	윤다원 (044-215-5915)
	<협조>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7261)
		담당자	사 무 관	윤혜수 (044-203-7254)
	<협조>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오준혁 (044-205-3101)
		담당자	사 무 관	문정목 (044-205-3129)
	<협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은섭 (044-202-3370)
		담당자	서 기 관	김웅년 (044-202-3690)
	<협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 무 관	장지훈 (044-202-7412)
	<협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세진 (02-2100-6321)
		담당자	사 무 관	이희원 (02-2100-6329)
	<협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창훈 (044-201-3634)
		담당자	사 무 관	이지연 (044-201-3638)
	<협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책임자	팀 장	정세희 (044-200-6740)
		담당자	사 무 관	강창현 (044-200-6736)

< 안전별 담당자 >

[저출생대책(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종진 (02-2100-1246)
		담당자	서 기 관	고선영 (02-2100-1247)
	저출산정책총괄과	책임자	사 무 관	김종완 (02-2100-1248)
		담당자	과 장	박소연 (02-2100-1241)
			서 기 관	고병현 (02-2100-1242)

[초고령화 대응방향(II):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	책임자	과 장	신영우 (02-2100-1273)
		담당자	전문위원	송민경 (02-2100-1275)
			사 무 관	안홍구 (02-2100-1274)

◇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 선정

⇒ ① AI 돌봄로봇, ②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③ 노인성 질환 치료, ④ 항노화·재생의료, ⑤ 스마트 홈케어에 대한 지원 우선 추진

1. Age-Tech 기술투자 확대

① 5대 중점 Age-Tech에 대한 R&D 대폭 확대(현재, 연간 약 3,900억원 투자 추정)를 위한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19페이지}

* (기술 예시) AI 돌봄로봇 Physical AI / 노인성질환 노화진행 패턴분석 / 재생의료 DNA 손상복구 / 웨어러블: 근육 피로도 측정 / 스마트 홈케어: 실내환경 센싱 등

②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위한 ‘가칭 디지털 대전환 Age-Tech Flagship Project(약 3,000억원 규모, 예타 신청 기준)’ 기획·예타신청 추진^{20페이지}

* (고도화 예시) AI돌봄로봇·웨어러블 보행보조기 + GPS·IoT ⇒ 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 디지털의료기기: 내시경 + AI ⇒ AI 내시경 / (스마트홈) 침대 + IoT 센싱 ⇒ 스마트침대

③ Age-Tech 기업 육성의 마중물 조성을 위한 바이오투자펀드(‘25년 500억원), 사회서비스투자펀드(現 215억원) 조성 및 활용^{21페이지}

* (바이오 투자펀드)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2. 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대

① 국내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를 혁신*^{24페이지}

* ① 재생의료 치료범위 단계적 확대: 중대·희귀·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 질환 추가
②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가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 조정(중위험 → 저위험) 등

②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의 건강정보를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25.3)^{25페이지}

③ Age-Tech 제품·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ge-Tech 리빙랩 설치 추진(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활용)^{28페이지}

3. 초기수요 창출

① Age-Tech 제품 등에 대한 안정적 수요창출을 위해 유망 Age-Tech 제품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강화^{29페이지}

- * ① (예비급여)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 확대
- ② (본 급여)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 허용

② Age-Tech 기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 구축과 제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25년, 2,000개소 이상)^{30페이지}

③ 재생의료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수출리스크 완화 및 산업육성 촉진을 위해 바이오 등 Age-Tech 분야 무역보험 지원 목표와('24년 5.1조원 → '25년 6조원) 정책금융 공급액을 확대('24년 7.1조원 → '25년 7.9조원)^{31페이지}

거버넌스 및 기반조성

① 전통적 고령친화산업과 AI, Io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법 전면 개정*^{34페이지}

- * 산업범위 재설정, 육성·진흥 계획 수립, 기술융합 및 진흥 정책 수단 확대 등

② 노화 관련 연구기관(국립보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학 등)간 코호트 등 연구자원 및 데이터 관리 강화^{35페이지}

③ 민관협업 활성화를 위한 Age-Tech 융합 얼라이언스 운영^{35페이지}

- (실버경제) 주요국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및 제품·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포괄적으로 '실버경제'로 정의
 - 고령층의 생산, 소비 등 직접적 경제활동 및 이에 파생되는 간접적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 (Age-Tech)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AI·IoT·웨어러블·로보틱스·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서비스
- (고령친화산업) 국내 법적개념으로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①용구·용품, ②의료기기, ③주택 및 시설서비스, ④요양서비스, ⑤금융·자산관리 서비스, ⑥정보기기 및 서비스, ⑦여가·관광·문화·건강지원 서비스, ⑧농업용품 ⑨영농지원 서비스, ⑩의약품, ⑪화장품, ⑫교통수단·교통시설 서비스, ⑬식품, ⑭급식 서비스 등으로 분류

< Age-Tech 적용기술별 주요사례 >

구분 기술	제품	SW/서비스
AI	 음성 명령을 통해 정보제공, 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등 보조 * AI 스피커	 고령층을 위해 학습된 AI 모델 및 응용 SW/서비스 *고령자용 AI 케어콜 서비스
IoT	 고령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제품 및 설비 *스마트 지팡이, 낙상예방 침대	 고령자용 IoT 제품 및 수집 데이터 기반의 SW/서비스 *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
웨어러블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 능력을 제고하는 착용형 기기 * 보행보조 웨어러블 AI 보청기 등	 고령자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SW/서비스 *웨어러블 맞춤 운동 서비스
로봇	 고령자의 신체 및 정서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 *배설 케어 로봇, 반려 로봇	 고령자용 로봇을 통해 제공되는 SW/서비스 *요양원 로봇 대여·관리
바이오테크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신약개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항노화·재생의료 치료를 위한 관광 서비스 등